

한말 외교사의 현대적 교훈

하 영 선 (서울대 외교학과)

21세기 한반도는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21세기 역사의 주인공, 무대, 그리고 연기의 내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문명사적 변환의 징후를 구체적으로 들어내고 있다. 21세기 한반도가 21세기 변환의 파도를 성공적으로 타고 넘어서 당당하게 무대의 중심에 서려면 19세기 한국의 역사적 교훈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21세기 한반도가 19세기 한국을 조심스럽게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풀어야 하는 문제의 유사성 때문이다. 전통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생긴 19세기 국난과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21세기 국난의 비교는 21세기 국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게 해줄 것이다.

19세기 국난사는 단순히 21세기 국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비교사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국난의 형성사로서도 중요하다. 오늘 우리 모습의 가장 중요한 기원은 19세기 중반 우리의 전통적 삶이 구미의 근대적 삶을 만났을 때부터였다. 이 과정에서 19세기 국난이 발생했고, 국난의 현실은 20세기에 들어서서 국망의 현실로 바뀌었다. 19세기 국난은 식민지 시기와 냉전시기를 거친 후 21세기 신세계질서와 만나면서 21세기 국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19세기 국난이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21세기 국난은 전통, 근대, 그리고 탈근대의 복합화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19세기의 국난 극복사는 미래사로서의 21세기 국난극복사의 필수적인 일부를 이루게 될 것이다. 21세기 국난극복의 처방을 19세기 국난극복 실패의 역사에서 찾아보려는 노력은 비교사, 형성사, 그리고 미래사의 관점에서 정당하다. 21세기를 위한 19세기의 역사적 교훈은 크게 문명표준론, 외세활용론, 국내역량 결집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문명표준론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국제질서는 포르투갈 주도의 16세기, 네덜란드 주도의 17세기, 영국 주도의 18세기를 거쳐, 다시 한번 영국 주도의 19세기를 맞이하였다.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변화속에서 지난 세기에 이어 두 번째로 영국이 주도하게 된 19세기는 16세기 이래 진행되어 온 국제화를 넘어선 보다 본격적인 국제화의 세기였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1840년대에, 그리고 일본은 1850년대에 구미의 근대국민국가들과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한국도 1860년대에 들어서서 병인양요(1866), 제네럴 셔먼호 사건(1866), 오페르트 南延君墓 도굴사건(1868), 신미양요(1871) 등을 거치면서 구미의 근대국민국가들과 불가피하게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당시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정치, 사회세력들은 서양세력에 대해 위정척사의 입장을 견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위정척사론

의 대표 주자였던 李恒老는 그의 「洋禍」에서 「中國의 道가 亡하면 夷狄과 禽獸가 물려온다」고 지적하고, 이를 다시 주석에서 「北虜(청)는 夷狄이니 오히려 말할 수 있지만, 西洋은 禽獸이니 可히 말할 것이 못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李恒老의 이와 같은 「華夷之別」에서 「人獸之判」으로 전개된 斥邪思想은 그의 제자인 金平默의 「禦洋論」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는 중국과 조선은 人類이나 서양은 禽獸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중국과 조선은 人道를 가지고 있으나, 서양은 禽獸之道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人道의 내용으로서 仁, 義, 禮, 智의 四瑞之德과 五品之論 및 禮樂刑政之教를 들고 있다.

척사론의 이러한 전통은 19세기 조선조의 사고와 행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19세기 새로운 문명 표준의 화려한 등장에도 쉽사리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척사론의 마지막을 장식한 柳麟錫은 宇宙問答(1913)에서 사람들이 모두 서양을 문명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문명은 백가지 기술과 천가지 기교가 극에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 그 궁극적 의도는 맛있는 음식, 사치스러운 옷, 웅장한 집, 강한 병사 등의 일을 모두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人獸觀에 기반한 위정척사론은 점증하는 외압의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1876년의 한일수호조규의 체결이후, 1880년대에 들어서서는 임오군란(1882)을 치른 후 개화의 길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東洋의 道와 西洋의 器를 결합하여 보려는 東道西器論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申箕善은 農政新編序에서 道와 器는 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동시에 서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道의 내용으로는 三綱, 五常 과 孝弟忠信을 들고 있으며 器로서는 禮樂, 刑政, 服食, 器用을 들고 있다.

그러나, 東道西器論의 문명관은 어디까지나 東道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西器의 수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東道西器論을 대표하는 관료였던 金允植은 1891년에 쓴 자신의 글에서 “나는 일찍이 開化之說을 심히 이상하게 여겼었다. 무릇 개화란 변방의 미개족이 거친 풍속을 고치고 歐州의 풍속을 듣고 점차 고쳐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東土는 문명의 땅이 어찌 개화하겠는가?..... 이 開發變化라고 하는 말은 文飾의 말이다. 소위 開化란 時務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는 조선의 시무로서 “청렴을 숭상하고 가난을 제거하여 백성을 구휼하는데 힘쓰며 조약을 잘 지켜 우방과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위정척사, 그리고 동도서기의 시각에서 구미국가들과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가들을 다루어 보려는 노력들이 쉽사리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 속에서, 문명개화의 시각에서 구미세력들을 조심스럽게 19세기 국제화의 새로운 문명표준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자리잡게 된다. 일본과 비교하여 전통과 근대의 갈등을 보다 힘들게 겪고 있던 19세기 한국에서 文明 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표적인 개화지

식인인 유길준이 일본 유학(1881.5 - 1883.1)의 초기에 福澤諭吉이 경영하는 時事新報에 쓴 「新聞의 氣力を 論함」(1882)과 「한성순보 창간사」(1883)에서 처음으로 문명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유길준은 1883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대세론」, 「경쟁론」 등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문명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길준은 「세계대세론」에서 인류를 개화의 차이에 따라서 야만, 미개, 반개, 문명으로 나누고, 오늘의 시점에서는 구주 제국과 미국을 문명개화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나라들이 결단코 개화의 극이 아니며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길준은 그의 대표 저서인 「西遊見聞」(1887-1889 집필, 1895 발행)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문명관을 확실하게 요약하고 있다. 그는 제 14편에 포함되어 있는 개화의 등급에서 개화는 「人間의 千事万物이 至善極美의 境域」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천하고금의 어느 나라도 이러한 개화의 극진한 境域에 도달한 나라는 없으며, 그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면 開化, 半開化, 未開化로 구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스스로 노력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반개화한 자와 미개화한 자도 개화한 자의 境域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세기 유럽의 근대 국제 질서가 새로운 문명 표준으로서 동아시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를 문명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직면하여 19세기 한국은 위정척사, 동도서기, 문명 개화라는 다른 유형의 대응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문명 개념의 도입사는 곧 치열한 언어의 정치, 언어의 전쟁 모습을 띠 수밖에 없었다.

국내 정치 사회 세력에 오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위정 척사 세력은 전통 언술체계로서 서세동점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보려는 힘겨운 싸움을 시도하였으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국내의 막강한 전통 정치 사회 세력의 저항 속에서 문명 개화세력이 주도한 새로운 언술 체계의 시도는 강한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문명 개화세력은 갑신정변(1884)의 실패로 인해 정치적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고 역사의 전면에서 일단 물러서야 했다. 이러한 역사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작게는 자신들의 생존을, 크게는 조선의 생존을 내다보면서 문명 개화세력은 문명 개념의 도입을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라는 시각에서 조심스럽게 추진했다. 더 나아가서, 유길준은 개화의 죄인, 개화의 원수, 그리고 개화의 병신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당시 조선의 현실을 격렬히 비판하고 있다. 전통없는 근대를 추구하는 개화의 죄인과, 근대없는 전통을 추구하는 개화의 원수, 전통의 긍정적 측면을 버리고 근대의 부정적 측면만 받아들인 개화의 병신만 존재하고 있는 19세기 후반 조선의 현실 속에서, 유길준이 당면하고 있었던 최대의 과제는 단순한 서양문명의 소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통과 근대의 갈등이 아닌 조화를, 더 나아가서 복합화를 당시의 어려운 국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복합화한 조선형 문명화 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해, 청국의 영향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반면에 개화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노력을 행동이 아닌 「西遊見聞」이라는 글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 유길준은 갑오개혁(1894)을 통해서 비로소 조선형 문명화의 실천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나, 첫째, 조선이 겪고 있었던 전통과 근대의 갈등, 둘째, 청일 전쟁 이후 청의 영향력 대신 급격하게 커지는 일본의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견제하기 어려운 국제적 여건, 셋째, 국내 역량의 효율적 동원 실패, 넷째, 조선형 문명화 모델의 실천 전략적 취약성 등으로 19세기 조선의 문명화 모색은 좌절된다.

그 이후 고종을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의 문명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조선은 20세기 상반기에 종속의 정치 현실로서 일본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45년에 이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함께 일본화의 종속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 질서의 형성과 함께, 한반도의 남과 북은 다시 한번 미국형과 소련형의 문명화 모델을 수용하게 되었다.

한반도가 냉전 질서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속에, 세계는 21세기를 앞두고 서서히 냉전의 역사를 벗어나서 탈근대 복합국가들의 부국 강병을 넘어선 복합 목표를 새롭게 추구하는 신문명의 가능성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는 19세기 유길준이 꿈꾸었던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라는 조선형 문명화의 길을 넘어서서 전통, 근대, 그리고 탈근대의 복합화라는 21세기 한반도형 문명화의 꿈을 새롭게 꾸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21세기 신세계질서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과 무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4백 년 동안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지난 백 오십 년 동안 근대국민국가가 부국과 강병이라는 무대에서 국가 중심 경쟁체제의 치열한 각축을 보여주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주목할만한 신인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 밖에서는 지구기업, 지구테러조직,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을 쉽사리 만날 수 있으며 국가 안에서는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및 개인의 역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인공 뿐만 아니라 무대도 새로 꾸며지고 있다. 부국과 강병의 단출한 무대가 안보, 번영, 지식, 문화, 생태균형의 복합 무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구체적으로 세계화론과 반세계화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론자들은 21세기 삶의 기반은 국가중심에서 지구중심으로 넓어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반세계화론자들은 21세기 삶의 기반이 표면적으로는 지구중심으로 확대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국가 또는 계급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논쟁은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한간에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한국 내에서도 충분한 합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논쟁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문명표준 논쟁이다. 한반도는 냉전질서의 어려움을 아직도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세계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그물망 국가들이 복합무대에서 활약하는 신문명의 가능성을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도 전통과 근대가 복합화한 19세기 조선형 국제화의 꿈을 넘어서서 전통, 근대, 그리고 탈근대가 복합화한 21세기 한반도형 세계화의 꿈을 새롭게 꾸고 현실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속에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이분법적 논쟁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2. 외세 활용론

오랜 역사동안 중국중심의 천하질서를 문명의 표준으로 삼아 왔던 한국이 구미중심의 국제질서를 새로운 문명표준으로 받아들이고 따라 잡기 위해서는 우선 문명사적 변환을 예민하게 읽어낼 수 있는 정치 주도세력의 비전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 다음 단계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국내외역량의 효율적 활용이다. 그 중에도 국내역량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할수록 국제역량의 활용의 비중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 메이지유신을 겪은 일본의 집요한 근대적 만남의 요구를 전통적인 교린관계의 회복이라는 명분을 빌어서 받아 들여 조일수호조약(1876)을 체결하게 된다. 일본은 이 조약에서 형식적으로는 조선의 自主之邦을 강조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일본의 지배를 위한 중국으로부터의 자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문명사적 변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중국형 모델을 벗어나서 새로운 모델을 찾아나선 노력이 자칫하면 새로운 일본의 예속을 불러 올 수 있는 위험성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한·청간의 중요한 비공식 통로였던 淸의 李鴻章과 조선의 領中樞府事 李裕元和의 서신교환에서, 李鴻章이 조선이 일본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以敵制敵」의 방안으로 서양의 여러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통상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유원은 터어키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 준 것으로 보아서는 공법이 믿을 만 하나 일본의 류큐 침공을 막지 못한 것을 보아서는 한국이 죄없이 남의 침략을 당하는 경우에 여러나라가 공동으로 규탄하고 나설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답하고 있다.

당시 국정의 중요 인물이었던 이유원의 외세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고종을 비롯한 개화세력의 외세 활용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높아갔다. 1880년 9월 金弘集은 제2차 수신사로 일본을 다녀오면서 주일공사 참찬관인 黃遵憲이 淸의 입장에서 19세기 조선의 생존전략을 요약한 「朝鮮策略」과 淸의 대표적 양무론자인 鄭觀應이 쓴 「易言」을 가지고 왔다. 이 글들은 근대한국의 생존전략으로서 自強과 均勢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세 회의론을 넘어서서 외세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고의 핵심은 중국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주변세력 견제용이었다.

국내 정치 사회세력들의 적지 않은 논쟁 속에서, 고종은 조심스럽게 개화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1880년 12월에는 관제를 개혁하고 대외관계기관으로 총리기무아문을 설치했다. 1881년 2월에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했으며, 1881년 11월에 영선사를 청에 파견했다. 그리고, 1882년 5월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은 실질적으로 만국공법체제를 수용하게 되었다.

임오군란을 겪은 직후 고종은 1882년 9월 발표한 개화정책에 관한 교서에서 외세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다의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외국과 교섭을 해오지 않았다. 따

라서 건문이 넓지 못하고 삼가 스스로의 지조나 지키면서 500년 동안을 내려왔다. 근년 이래로 천하의 대세는 옛날과 판이하게 되었다.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여러나라들 즉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정밀한 기계를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배나 수레로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병력으로 균형을 이루고 공법으로 의지하는 것이 마치 춘추열국시대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홀로 존귀하다는 중화도 오히려 평등한 조약을 맺고, 척양에 엄격하던 일본도 결국 수호를 맺고 통상을 하고 있으니 어찌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는가…조약을 맺고 통상하는 것은 세계의 공법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만일 그들이 우리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모욕할 때에는 응당 조약에 근거하여 처벌할 것이며 절대로 우리 백성들을 굽히게 하고 외국인을 두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그리고 이왕 서양의 각국과 수교를 하였으니 京外에 세워놓은 척화비는 세월이 달라진 만큼 모두 뽑아버릴 것이다。」

고종이 이렇게 입장을 밝히자, 외세활용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입장의 논의들이 상소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수준은 청과 마찬가지로 구미 국제질서의 중요한 원칙을 우리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구미국가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들의 논리로서 반박하려는 援用論이었다. 그리고 구미 국제질서의 논리는 우리의 과거 전통속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附會論이었다. 19세기 조선의 동도 서기론을 대표하는 인물인 김윤식은 이러한 입장을 다음의 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래 他交도 없으며 오직 淸國을 上國으로 모시고 동쪽의 일본과 통교하였을 뿐이다. 수십년 전부터 세상의 정형이 매일같이 변하며 歐洲는 雄長이 되고 동양의 제국이 모두 그 公法을 따르게 되었다. 이것을 버리면 고립하고 도움이 적어지며 혼자만으로는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청국과 일본도 泰西 각국과 함께 이것을 수호하고 조약을 체결한 나라들이 벌써 20여 개국에 달한다.」

김윤식은 만국공법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선의 생존을 위한 속방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각국에 조선이 중국의 속방임을 聲明하면 중국도 우리를 擔任하지 않을 수 없고, 각국 또한 우리를 가볍게 보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유사시 힘써 도와주지 않으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아래에 內治는 自主에 속한다는 내용까지 넣는다면 만국공법체제속에서 구미제국과의 조약체결에서도 방해되지 않을 뿐아니라 국권을 상실할 염려도 없어지게 되니 一舉 兩得이다.」

김윤식의 兩得體制는 淸과의 자주적 속방관계를 유지하면서 태서 각국과 만국공법에 따라 조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1885년 거문도 사건당시 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으로서 한성주재 청국상무총판, 미국대리공사, 일본대리공사, 독일총영사에 당시의 만국공법에 따른 조회를 보냈다. 김윤식의 이 조회는 구미 제국들이 상대방 국가들의 법률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규제하는 것을 원용하여 구미국가 자신들의 법인 만국공법으로 상대방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해 보려는 중요한 시도였다.

유길준은 김윤식의 원용론과 부회론을 넘어서서 만국공법의 기본원리를 일단 수용한다. 그는 초기 작품인 「世界大勢論」에서 세계를 개화의 차이에 따라 야만, 미개, 반개, 문명으로 나눈 다음 동아시아를 반개에 포함시키고, 구주제국과 미국을 문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競爭論」(1883)에서 이러한 아시아와 유럽의 차이를 交通과 競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조선이 문명부강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신」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배우고 우리의 장점을 보존하고 키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中立論」(1885)에서 「한 나라가 약소하여 自力으로 중립의 정책을 지킬 수 없으면, 이웃 나라들이 서로 협의하여 행하기도 함으로써 자국 보호의 방책으로 삼기도 하니, 이는 바로 부득이한 형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법이 허용하고 있는 바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어려운 국제정치 현실을 분석한 다음 「아마도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대저 한 나라가 自強하지 못하고 여러 나라와의 조약에 의지해 간신히 자국을 보존하고자 하는 계책도 매우 구차한 것이니 어찌 즐겨 할 바 이겠는가.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형세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억지로 큰 소리를 치면 끝내 이로운 일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길준은 「西遊見聞」에서 현실의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대소와 강약 때문에 형세가 적대하기 어려울 경우에 강대국이 公道를 돌아보지 않고 그 힘을 자의로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약소국은 강대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과 강대국의 관계는 주권과 독립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受貢國과 贈貢國의 관계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길준은 淸과 같은 증공국과 조선과 같은 수호국이 새롭게 겪는 국제질서를 兩截體制로 부르고 있다.

한반도의 생존과 평화를 위해서, 유길준은 구미 국제질서의 기본원리인 국가 중심의 부국강병경쟁을 수용해서 일차적으로는 자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강의 현실적 제약 속에서, 균세와 만국공법의 도움으로 淸과 속방관계가 아닌 증공국과 수공국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근대 국제관계를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유길준의 외세활용론은 현실주의 활용론을 인정하면서도, 자유주의 활용론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생존과 평화가 쉽사리 보장되지 않는 속에 근대 한국은 보다 현실주의적 외세 활용론을 모색하게 된다. 한반도의 근대 외세 활용론이 위정척사파의 외세 거부론에서, 동도서기론의 제한 활용론, 온건 개화론의 수용론을 거쳐서 만국공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자강과 균세에 기반한 국가 중심의 경쟁을 통해 국가의 생존과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논의에 이르게 된다.

갑신정변(1884) 실패 이후 일본으로 망명하여 기약없는 조선의 개화를 꿈꾸면서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던 박영효는 1888년 상소문의 형식을 빌려서 조선의 개혁방안을 상세하게 제안하고 있다. 그는 이 상소문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국제상황을 대단히 현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자존자립없는 외세활용의 어려움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는 옛날 전국시대의 열국들과 같습니다. 한결같이 兵勢를 으뜸으로 삼아,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병합하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삼키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준비를 강구하는 한편, 아울러 문예를 진흥하여, 서로 경쟁하고 채찍질하며 앞을 다투지 않음이 없습니다. 각국이 自國의 뜻을 공고히 하여 세계에 위력을 흔들며 보고자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빈틈을 이용하여 그 나라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비록 만국공법, 군세, 公儀가 있기는 하나, 나라가 自立自存의 힘이 없으면 반드시 영토의 삭탈과 분할을 초래하여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公法公儀는 본래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유럽의 문명강대국도 역시 패망을 맛보았는데, 하물며 아시아의 미개약소국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대체로 유럽인들은 입으로는 法義를 일컬지만 마음은 짐승을 품고 있습니다。」

청일전쟁과 함께 근대 한국의 외세활용론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우선, 청일전쟁에서 淸이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하자, 중국은 1840년의 아편전쟁 이후 반세기 만에 구미의 근대국제질서를 새로운 문명표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淸의 중주권이 명실상부하게 소멸되고 일본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위험 속에서, 위정척사론자들의 인간과 금수의 이분법에 기반한 외세 거부론 대신에 동도서기론자들의 제한적 외세 활용론을 채택하게 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친일내각이 단발령을 내리고 개혁정책을 추진하자 유생들의 항일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최익현은 상소문에서 “각국이 통화하는 데에는 이른바 공법이란 것이 있고 또 조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속에 과연 이웃나라의 역적을 도와 남의 나라 임금을 협박하고 국모를 시해하라는 문구가 있는가”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1905년 을사조약이후의 의병활동에서 계승된다.

청일전쟁이후 한국은 중국대신 빠르게 증가하는 일본의 억압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를 비롯한 외세를 활용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 더 이상 외세활용의 가능성을 잃어 버리고, 일본의 배타적 영향권에 포함되는 비극을 맞이했다.

전후 냉전질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한반도에서, 북한은 비교적 일찍부터 반외세 자주와 친외세 종속이라는 경직화된 이분법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외세를 다뤘다. 한편, 한국도 뒤늦게 1980년대 이래 친미론과 반미론의 이분법적 논쟁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한반도가 스스로 주인되기 위해서는 친외세 종속이나 반외세 자주의 냉전적 사고를 넘어서서 외세활용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반도 자주외교의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19세기의 비극을 21세기 한반도에서 재현하지 않으려면 우선 21세기 동아시아 세계정치관을 친외세나 반외세와 같은 교과서 수준의 피상적 안목을 넘어서서 21세기 세계수준의 심층적 안목으로 읽어 낸 다음, 21세기 외세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21세기 우리 정부, 언론, 학계의 외세읽기와 생존변영 전략 마련은 19세기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1세기의 외세를 1950년대의 보수나 1980년대의 진보라는 뒤늦은 시각에서 자아도취적으로 재구성하고 활용방안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가

단순히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서 자주외교의 길로 들어서려면, 50년대식 보수주의나 80년대식 진보주의의 시각을 하루 빨리 청산하고 21세기 진보의 시각에서 주변 열강을 심층적으로 읽어내고, 이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지지기반위에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

3. 국내역량 결집론

19세기와 20세기 초 국난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국내역량을 미래지향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지도세력의 부재는 국내역량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 비극적 결과는 국내역량의 국제역량 활용이 아니라, 국제역량의 국내역량활용이었다.

19세기 한국은 1880년대에 들어서서 뒤늦게 근대국가 건설을 시도하게 되나, 수구와 사대세력의 갈등으로 발생한 갑신정변(1884)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한국은 갑오개혁(1894/7-1896/2)을 통해서 보다 본격적 근대국가 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정치세력들이 갑오개혁과, 갑신정변과, 정동파(친미파), 대원군파, 궁정과 등으로 나누어져 싸움으로써 개혁 프로그램의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한국은 20세기에 들어서서야 뒤늦게 국론통합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청일전쟁의 결과로 한반도에서 청의 중주권이 실질적으로 소멸하게 됨에 따라, 국내의 많은 전통 유학 지식인들이 양무론을 넘어서서 변법론의 불가피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청조말 대표적 개혁 지식인인 량치차오(梁啓超)의 국난극복론인 「음빙실문집(飲冰室文集)」을 통해서 사회진화론에 기반한 국제질서관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제까지 금수로 취급했던 구미 제국들을 드디어 국민경쟁의 세기에 앞서가는 국가들로 보고 이를 하루 빨리 따라 잡아야 할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갑신정변(1884)의 실패로 역사의 뒀안길로 물러섰던 개화세력들은 갑오개혁을 통한 역사현장에의 복귀를 시도하고, 고종은 광무개혁(1897-1907)을 통해 나라의 기울어짐을 막아보려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다. 서세동점이라 처음으로 개신유학론자들과 문명개화론자들은 사회진화론에 기반한 문명표준론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애국계몽기(1905-1910)의 신문이나 잡지들을 통해서 구체적 모습을 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뒤늦은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마지막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국계몽운동(1905-1910)의 수준에 머무른 채 국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망의 비극을 맞이해야 했다.

한반도에 백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보수와 진보라는 구시대적 구분 아래 외세관, 대미관, 통일관의 국론 분열을 뒤늦게 겪고 있다. 한반도가 21세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외세활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내역량의 결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 21세기 문명표준의 우등생들은 이미 등교가 끝나고, 교문이 닫히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각생들끼리 서로 앞섰다 싸우는 처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세기 우리 정치인들은 구시대적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잣대로서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전형적 문명의 지각생들이다. 21세기 기준에서 보면 모두 수구세력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론, 방송, 인터넷 언론도 마찬가지로 형편에 놓여 있다. 우리 언론, 방송 매체들은 우리 국민들의 사고와 행동을 21세기 신문명 표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보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보수와 진보의 홍보전에 골몰하고 있다. 학계도 21세기 새로운 담론의 창조적 생산자의 역할 대신에 정계, 재계,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의 정치적 담론을 홍보하는 역

할에 머무르고 있다.

오늘의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주도 세력이 우선 외세와 자주의 19세기 이분법적 사고를 하루 빨리 졸업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보수와 진보세력들에게 「자주적 세계화」라는 21세기 진보의 구호아래 국론통합을 이루자는 대내적 외침의 국내정치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음으로 친미와 반미라는 20세기 냉전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21세기의 시각에서 본다면, 친미가 보수인 것만큼이나 반미도 보수이다. 따라서 정치주도세력은 21세기 용미의 시각에서 국론통합을 이뤄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반통일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21세기의 통일론은 더 이상 19세기 서세동점의 통일론과 20세기 동서 냉전의 통일론과 같을 수 없다. 21세기는 역설적으로 반통일의 세기이다. 왜냐하면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하나의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지역, 국가, 지역, 지방, 개인 모두가 자율성을 가지고 통하는 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4.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21세기 국난이 국망(國亡)의 길 대신에 국흥(國興)의 길로 이어지려면 19세기 국난의 역사적 교훈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19세기의 실패와는 달리 21세기 문명사적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읽고, 새로운 문명표준을 달성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세계 역량을 활용하고, 국내 역량을 결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21세기 국흥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21세기 문명의 중심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주변 열강의 활용뿐만 아니라 21세기 삶의 공간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 안보국가, 번영국가인 동시에 지식국가, 환경국가, 문화국가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달린 386세대를 넘어서서 열린 신세대를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키워야 한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 국난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그네를 탈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의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100년 전의 옛날에서 오늘을 볼 줄 알아야 하며, 100년 후의 앞날에서 오늘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19C서 배우는 21C 국난해법」과 함께 「22C서 배우는 21C 국난해법」이 중요하다. 19세기의 역사적 교훈이 21세기 국난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21세기의 현실은 19세기 국난해법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다. 전통적 천하질서 속에서 예의지국을 문명의 표준으로 삼고 있던 19세기 한국은 근대국민국가의 부국강병이라는 새로운 구미 중심의 문명표준 앞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 했다. 당시의 정치주도 세력들이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었다면 위정척사, 동도서기, 문명개화 세력 간의 갈등을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현실은 가혹했다. 우리는 역사의 그네를 타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발 밑만 내려다보고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문명사적 변화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19세기의 역사적 대응과 흡사하게 21세기형 위정척사, 동도서기, 문명개화의 대응양식이 다시 한번 혼전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북쪽은 21세기에 19세기의 고전적 위정척사론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21세기 북한의 강성대국론은 19세기의 부국강병론의 반복에 가깝다. 한반도의 남쪽은 북측의 위정척사론, 구미의 지구화론, 21세기 동도서기론으로서의 한국적 세계화론을 동시에 품고 있다.

19세기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역사의 그네를 제대로 걸어야 한다. 100년 전을 되돌아보고 동시에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오늘의 그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년 앞의 세계질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역사의 주인공, 무대, 그리고 연기술의 변모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근대 이래 역사의 화려한 주인공이었던 국민국가는 무대에서 사라지지는 않지만, 국가 안팎의 새로운 조연과 창조출연자들과 함께 새로운 드라마를 엮게 될 것이다. 국가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지구조직, EU 같은 지역조직, 그리고 경실련 같은 시민사회조직이 무대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근대의 중심 무대인 강병과 부국도 새로운 변모를 겪게 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무대로서 지식 무대의 중요성이 기존 무대에 못지 않게 부상할 것이며, 동시에 문화 무대와 생태균형 무대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연기술 변모의 경우에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근대의 연기술이 흡스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늑대의 싸움을 닮은 것이라면, 100년 후의 연기술은 거미와 말미잘을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22세기의 주인공들은 끊임없이 중심 없는 그물망을 치면서, 동시에 그물망을 끊임없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5, 5중 그물망국가를 건설하자

역사의 그네를 타고 내다본 100년 후 세계질서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그네를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할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22세기 삶의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중국 중심의 천하공간 속에서 우리 나름의 삶의 공간을 만들어 살아왔던 한국은 19세기 중반 구미 중심의 근대 국제질서와 만나면서 국민국가라는 새로운 삶의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새로운 공간 마련에 실패한 한국은 결국 식민지 생활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힘입어 한국은 부활의 해방공간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국제 역량의 냉전화와 국내 역량의 분열 갈등 때문에 분단국가라는 현실에 머물러야 했다.

22세기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은 한반도 통일의 그물망 짜기다. 분단국가의 극복은 사실 22세기가 아닌 19세기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19세기의 뒤늦은 숙제를 풀지 않고 바로 22세기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역사의 지름길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21세기의 통일론은 더 이상 19세기의 통일론이 돼서는 안 된다. 19세기가 닫힌 통일론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열린 통일론의 세기다. 남과 북이 하나되는 것(一統)은 안과 밖의 주인공과 모두 통하기 위한 것(全統)이라야 한다. 22세기의 시각에서 보면 닫힌 통일은 차라리 열린 분단보다도 못하다.

한반도 통일의 그물망과 함께 22세기 삶의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그물망을 제대로 짜야 한다. 100년 앞의 동아시아 무대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이 오만과 일방주의의 유혹을 넘어서서 질체의 미학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미국은 21세기에 동아시아 질서를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주도적으로 조종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21세기 동아시아 질서 변화의 폭풍의 눈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21세기 용외세정책은 미·일 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되 중국을 동시에 품는 ‘복합 외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22세기 삶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동아시아 공간의 활용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의 동북아 경제 중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유럽이 근대의 노년기를 맞이해서 비로소 유럽연합을 건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대의 청춘기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는 상당한 기간 동안 협력과 함께 갈등의 만남을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닫힌 동아시아 중심보다는 열린 동아시아 그물망 짜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2세기 삶의 공간 확대를 위해서 세계화의 그물망짜기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세계화나 반세계화냐가 아니라 어떤 세계화냐라는 것이다. 그것은 구미 일부에서 논의되는 소박한 의미의 지구화가 돼서는 안 된다. 동시에 단순한 국가이익의 지구적 확대라는 국제화나 세계 자본주의의 명분론이 돼서도 안 된다. 그것은 한반도 이익과 지구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적 세계화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다음으로 사이버 공간의 그물망 짜기에 주목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디지털 정보에 기반한 집단상상에 의해 구성된 다양한 그물코(node)들이 상호 작동하는 그물망(network)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 대중화의 길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이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가는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 이미 현실 공간의 제약을 일부 해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라 밖의 공간에 못지 않게 나라 안의 공간 그물망 짜기가 중요하다. 22세기는 국가 공간의 전성시기에서 국가·사회·개인 공간의 복합적 공존기로 변모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22세기 한반도 통일국가는 국내의 다양한 정치·사회 세력들과 개인까지도 그물망을 짜서 상이한 이해들을 정책결정 이후가 아닌 이전에 조종함으로써 다양한 세력들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밖의 중요 국제 역량, 지역 그물망, 지구 그물망들을 촘촘하게 연결해서 그물망 국가를 완성해야 한다. 19세기가 일통(一統)의 시대라면, 22세기는 전통(全統)의 시대다.

6. 지식기반 복합국가를 건설하자

예(禮)의 무대에 오랫동안 익숙했던 한국은 19세기 중반 강병과 부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 올라가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변신에 재빨리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다. 한반도의 남과 북은 20세기 중반 뒤늦게 19세기의 밀린 숙제인 부국강병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 반세기의 노력은 한반도의 남북에 각기 다른 결과를 선물했다. 북한은 근대 국가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서도 강성대국이라는 미완의 숙제 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근대국가 건설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21세기에 들어서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의 꿈을 키우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근대문명의 상징이었던 부국강병의 무대가 새로운 변모를 겪고 있다. 부국강병의 무대는 새로운 치장을 하고 있고, 지식, 문화, 생태균형의 무대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21세기 힘의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식력, 문화력, 그리고 생태균형력이 새로운 힘의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22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군사경제대국에서 복합국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지식 무대는 특히 중요하다. 19세기 산업혁명이 경제력의 비중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였다면, 21세기 정보기술혁명은 지식력의 중요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높이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핵무기 대신에 첨단정보기술이 중요해 졌으며, 경제적으로는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정보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적으로는 세계 지식질서의 재구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사이버 자아와 사이버 공동체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력의 기반 없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는 22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

한반도에 22세기 복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22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질서에 걸맞은 안보번영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한반도가 뒤늦게 통일의 숙제를 풀더라도 22세기 동아시아와 세계질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박한 평화국가를 넘어선 방어적 안보국가를 구축해야 한다.

방어적 안보국가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및 지구 안보와 개인 및 사회 안보를 동시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지구 번영 및 국내 복지와 상충되지 않게 국민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번영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소득 1만달러를 2만달러로 향상시키려면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와 국제경쟁력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반도 복합국가는 안보 번영국가인 동시에 지식 문화 생태균형국가여야 한다. 그 중에도 지식국가의 본격적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정보기술의 전사회적 기반 구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정부·학계·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세계 지식질서의 첨단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주도해 보려는 지식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 전쟁의 성패가 22세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대학원의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교육연구 제도하에서 지식강국을 꿈꾼다는 것은 허망한 기대이다.

7. 한국적 세계화 세대를 키우자

19세기 한국은 국망을 피하기 위한 국내 역량 결집에 실패했다. 근대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개혁의 주도세력들은 국내외 역량들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활용 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22세기 한반도 그물망 복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내 역량의 결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심각하다. 근대화 시기에 성장한 기성세대는 더 이상 오늘의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386세대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1980년대의 냉전과 권위주의와의 투쟁 분위기 속에서 22세기는 물론이고 21세기도 준비하지 못한 세대이다. 탈냉전과 반권위주의는 1980년대의 투쟁구호일 수는 있지만, 21세기와 22세기의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푸는 데는 냉전과 권위주의만큼이나 쓸모가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역사에는 지름길이 없다. 21세기 한반도 정치 사회의 주도 세력이 하루 빨리 경직화된 2분법적 사고와 행동을 졸업하는 동시에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안목으로 키워야 한다. 밖으로는 한국적 이익과 지구적 이익을 동시에 품을 줄 아는 한국적 세계인으로서 지구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안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갈등을 투쟁이 아닌 조정으로써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1세기 국난에서 22세기 국흥으로의 길은 우리 사회가 21세기의 이중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하느냐에 달려있다.